

2007년 금속 산별교섭 평가*

조 성 재**

I. 머리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속부문은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2007년의 경우에도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었다. 즉, 2006년에 현대차를 비롯한 다수의 대규모 사업장들이 기업별에서 산별로 조직형태를 전환한 이후 첫번째 맞이하는 단체교섭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2001년 이후 7년차를 맞이하는 조합원 4만 명 규모의 기존 금속노조의 전통은 어떻게 계승, 혹은 변형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은 과거의 양태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었으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들이 산별교섭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을 뿐이다. 2006년 산별전환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을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도 금속부문에서는 산별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대기업 사용자들이 2008년 이후 중앙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하는 등 산별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측의 산별교섭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으로 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속노조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구조와 환경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

* 본고는 노동부 수탁연구과제인 『2007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금속 산별교섭』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함께 수행한 경상대 이종래 교수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 단, 이 글은 필자가 대표집필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책임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chosj@kli.re.kr).

도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7년 금속 산별교섭의 전개과정과 합의내용, 분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금속부문 노사관계를 진단해보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아직은 잠정적인 평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내년 이후의 단체교섭 과제들을 논의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II. 2007년 금속 산별교섭의 주체 여건

1998년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연맹, 현충련 3조직의 통합에 의해 출범한 금속산업연맹은 초기에 산별로 조직형태를 전환할 것을 추진하였지만, 2001년 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출범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장을 중심으로 3만여 명만이 결합하였다. 이후 조합원수가 4만여 명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현대차 등 주력 대기업 사업장이 결합하기까지는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6년 동안 기존 금속노조는 <표 1>에서 보듯이 대각선교섭에서 시작하여 지역집단교섭, 중앙교섭 등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을 발전시켜 왔으며, 사용자에 대한 끝없는 압박투쟁을 통하여 결국 사용자단체의 성립까지도 끌어내게 되었다.

<표 1> 기존 금속노조의 교섭 발전과정

	투쟁의 발전	교섭형태의 발전	단체협약의 발전	사측 변화
2001	시기집중투쟁	대각선교섭 (경주 집단교섭)	사업장단협의 승계 (전문 집단교섭 유효기간)	
2002	지부별 통일투쟁	지부집단교섭 지회대각선교섭	기본협약 합의	전국노사실무위원회
2003	전국통일투쟁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대각선교섭	주5일제 등 중앙교섭 합의	교섭 체결권 위임, 금속노조관계사용자회의
2004	전국통일투쟁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	중앙협약 발전과 사업장단협 체계정비	교섭 체결권 위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준비위원회 수준)
2005	전국통일투쟁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	중앙협약 발전과 사업장단협 체계정비	금속사용자협의회 (사용자단체 구성추진)
2006	전국통일투쟁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	중앙협약 발전 사업장단협 내용정비 추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 단법인 출범

그렇지만 여전히 사업장 단위의 보충교섭에서 임금인상액(률)이 결정되는 등 기업별 교섭의 관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지부-지회에 이르는 3층교섭과 중복쟁의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교섭 합의내용은 손배·가압류 금지,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에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설정,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노력 명시 등 방향성은 훌륭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여전히 금속 산별교섭은 조직, 의제, 형식, 정책역량 등의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들의 결합으로 이러한 과제가 더 높은 수준에서 해소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표 2>는 2006년의 산별전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들도 전환을 결의하여 총 28개 노조, 10만 명이상의 조합원이 새로 산별조직으로 포괄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한국델파이, 대경특수강, 한라공조 등은 두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산별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이들 새로 가입한 노조들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금속노조는 2006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대기업 지부를 한시적으로 3년간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만도 등 5개 기업은 당분간 기업별 단위의 교섭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기존 금속노조에서도 만도는 기업지부로 특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듯 대기업 지부와 지역지부가 공존하는 것은 전환기에 불가피한 양태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2007년의 경우 노조측은 중앙교섭 이외에 지역지부교섭과 대기업 지부교섭을 각각 준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사용자측은 노조의 조직전환에도 불구하고 산별 단체교섭에 대한 거부감이 클 뿐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의 틀을 정하기 위한 논의와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가입을 주저하는 것은 물론 중앙교섭 참가와 관련해서도 '일단 거부' 이외에 뚜렷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다. 다만 전국적 노사관계의 중심인 현대차에서는 산별교섭에 대한 전면거부가 초래할 수년에 걸친 힘대결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조건부 참가' 입장을 노측에 전달하면서 산별 교섭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해 보낸 공문으로서 이러한 '조건부 참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대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거나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이후 노사간 교섭의 초점은 2008년 이후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약속, 즉 약속서를 쓰고, 받는 것에 두어졌다. 이에 따라 2007년을 경과하면서 사용자단체 가입사업장은 90개,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나 중앙교섭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20개, 아예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은 112개 등으로 분

〈표 2〉 2006년 산별노조 조직전환 조합원 투표 현황 및 결과

	노동조합	재적수	투표일정	투표(율)	찬성(율)	전환 여부	비 고
서울	대우자동차판매	149	6/26~29	142(95.3)	139(97.9)	○	무효 0
	기아자동차	27,489	6/29~30	25,892(94.2)	19,765(76.3)	○	무효 111
경기	쌍용자동차	5580	7/4~5	4942(88.6)	4509(91.2)	○	무효 15
	두원정공	538	6/27	521(96.8)	478(91.8)	○	무효 0
	진광ENC	47	6/30	42(89.3)	30(71.4)	○	무효 1
	캐리어	185	6/30	173(93.5)	138(79.8)	○	무효 0
	대경티엘에스	8	7/7	7(87.5)	7(100)	○	
	아남르그랑	67	8/30	63(94.0)	63(100)	○	
	와브코코리아	55	9/12	55(100)	37(67.3)	○	
	비오디하이디스	810	9/27	737(90.9)	692(93.9)	○	무효 5·기권 5
	수산중공업	114	11/7	84(73.7)	40(47.6)	×	
	안양지역금속	11	11/11~12	11(100)	11(100)	○	
	인천	대우자동차	9,149	6/27~28	8,434(92.2)	6,495(77.0)	○
현대제철		3,256	7/18~19	3,101	2,118(68.3)	○	무효 9·기권 155
대구 경북	한국델파이	980	6/30	920(93.9)	448(48.7)	×	무효 7
		981	10/25	943	635	○	무효 2
	성광	31	7/5	29(93.5)	11(37.9)	×	
	대경 특수강	148(1차)	7/14	144(97.3)	95(66)	×	
		150(2차)	9/28	147(98.0)	108(73.5)	○	
	세아제강	557	7/19	533(95.7)	276(51.8)	×	무효 1
	동양석판	184	7/19~20	177(96.2)	103(58.2)	×	무효 1
광주 전남	현대하이스코	530	7/20	519(97.9)	387(74.6)	○	기권11
	캐리어	938	8/21	843(89.2)	604(71.6)	○	무효 6

〈표 2〉의 계속

	노동조합	재적수	투표일정	투표(율)	찬성(율)	전환 여부	비 고
울산	현대미포조선	2,913	6/28~30	2,808(96.4)	1,490(53.1)	×	무효 21
	현대자동차	43,758	6/29	39,966(91.3)	28,590(71.5)	○	무효 204
	덕양산업	597	6/30	560(93.8)	459(82.0)	○	무효 2
	현대자동차비정 규직	1,113	6/27	868(78)	846(97.5)	○	무효 4
	메티아	156	6/29~30	148(94.9)	123(83.1)	○	무효 1
부산 양산	대우버스	668	6/30	623(93.3)	393(63.1)	×	무효 63
	유성금속	26	9/13	23(88.4)	19(82.6)	○	
경남	대우조선	6,891	6/26~28	6,514(94.5)	3,055(46.9)	×	무효 27
	위아	1,002	6/29~30	891(88.9)	535(60.0)	×	무효 3
	메티아	163	7/20	157(96.3)	105(66.9)	○	무효 2
	STX조선	1,045	6/29~30	947(90.6)	681(71.9)	○	무효 4
	로템	2,098	6/30	1920(91.5)	1490(77.6)	○	무효 18
	불보건설기계코 리아	661	6/30	617(93.3)	489(79.2)	○	무효 2
	클라크지게차	171	6/28	165(96.5)	106(64.2)	×	무효 1
	대원강업	813	9/28	753(92.6)	502(66.7)	○	무효 1·기권 60
충청	한라공조	840	6/29~30(1차)	782(93.1)	447(57.2)	×	무효 1
			9/27~28(2차)	738(87.8)	524(71.0)	○	무효 2·기권 4
전체	총회 조합원 114,997, 산별노조 신규 조합원수 101,250, 산별전환 노조수 28						

자료: 금속노조, 『제18차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2006. 11. 23.

화되었다. 사용자단체 사업장이 2006년에 87개, 중앙교섭 인정 사업장이 전체에 24개,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이 전체에 42개였던 것에 비하면, 새로 금속노조로 가입한 사업장은 2007년에는 대부분 중앙교섭에도 참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표 3〉 금속노조 2007년 교섭요청에 대한 현대차의 회신공문

1. 귀 노조 공문 금속 현대 07-05-001호(금속노조 2007년 기본협약·임단협 교섭 요청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사의 입장을 통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중략)
3. (중략)
4. (중략) 기존의 중앙교섭(통일교섭) 방식을 통한 교섭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각 시간 현격한 근로조건과 지불능력의 격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통일적으로 조율하기는 더욱더 곤란하며, 교섭의제 또한 교섭단위별로 명확치 않아 중복교섭의 폐단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등 누가 보더라도 효율적인 교섭이 진행되리란 기대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5.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회사는 중앙교섭(통일교섭)이 진행상 여러 혼란과 갈등이 예견되고, 더욱이 사용자단체와 맺은 기본협약 등의 요구 안건 중에는 일괄적으로 당사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당사가 중앙교섭(사용자단체 가입 포함) 방식에 동의(중앙교섭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귀 노조의 중앙교섭 요청에 대하여 단위사업장의 여건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와 토론 등 생산적 교섭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노와 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6. (중략) 끝.

Ⅲ. 중앙교섭의 전개과정과 합의내용

금속노조에 새로 가입한 노조 조직에 대응하는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 구성이나 중앙교섭 참가에 부정적인 가운데에서도 이미 기존 금속노조에 대응하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교섭은 이 두 노사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의 공방은 완성차 4사 등 대기업들의 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금속 사용자단체가 자신의 권한과 능력 밖이라는 반론을 펼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노조가 잡아놓은 일정대로 한미FTA 반대 파업을 벌이는 동안에는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중앙교섭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 11일의 5차 교섭 때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7월 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노조가 진행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기존 관행과 마찬가지로 초기와 중기에 걸쳐 지리한 살바싸움이 지속되거나 급년처럼 정치파업이 전개되거나 하다가 사실상 임단협 관련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후 사측은 6차 교섭에서 최초로 제시안을 내놓게 되고, 이후 몇 차례의 공방 끝에 7월 25일 10차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표 4〉 2007년 금속산업 중앙교섭의 진행경과 개괄

	일시 (월/일)	장소	주요 내용
준비	5/4		△노측 교섭요구안 총 207개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
	5/18		△중앙교섭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 △경남, 부산·양산, 인천의 지역교섭대표가 선임되지 못한 상황을 노사양측이 공유함
1차	5/22	서울	△사용자단체에 대기업의 가입여부를 두고 논란(자동차완성 4사 교섭불참을 5월 21일 공문으로 통보해 옴)
2차	5/29	대전	△교섭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 △3중 교섭구조에 대한 논란
3차	6/5	서울	△교섭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 △사용자단체 미가입 사업장의 조직화 문제에 대한 논란
4차	6/12	대구	△산별교섭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노사양측 입장표명, △한미FTA 체결관련 총파업준비를 이유로 노측 교섭결렬 선언, △교섭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의 창구는 허용함
	6/25~6/29		△금속노조 한미FTA 저지 총파업
5차	7/5		△금속노조 중노위에 총 222개 사업장의 조정신청을 함, △금속노조 사측에 쟁의발생 통보
	7/9	서울	△노사 실무협의: 중앙교섭 재개, 교섭의제, 축소교섭단 운영에 대한 논의
	6/27~7/11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찬성 71.1%, 반대 28.1%, 무효 0.8%)
	7/11	서울	△중앙교섭 재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표명, △노측 요구안 설명을 시도, △사측 중앙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약속된 사항 이행촉구, △교섭의 본격화를 위해 7월 13일(목)에 중앙교섭을 개최하자는 요구안 제출
6차	7/13	서울	△노측 요구안에 대한 사측 최초제시안 제출, △노측 사용자측 제시안 거부
7차	7/16	서울	△18일로 예고된 총파업투쟁을 이유로 사측 교섭불참
8차	7/19	서울	△사측 2차 수정안 제시, △기본협약 갱신문제를 둘러싸고 논란 이후 교섭결렬
9차	7/23	서울	△사측 3차 수정안 제시, △축소교섭 시도하였지만 기본협약 명칭문제로 합의결렬
10차	7/24~7/25	서울	△사측 4차 수정안 제시, △축소교섭과 본교섭을 연이어 벌여 의견 접근함,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도출(산별협약 정비문제는 명칭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원사로 변경하는 수준에서 사측이 수용, 신기계·신기술 45일 전 통보, 최저임금 차등인상(50인 미만 890,980원, 50인 이상 895,100), 노사공동연구팀구성에 합의)
결과	8/28~8/30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투표율 84.4%, 찬성률 80.2%)
	9/12	서울	2007년 중앙교섭 합의안 조인식

〈표 5〉 2007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지회수/ 사업장수	총조합원	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기권	투표율	찬성률
전 체	109/111	24,441	20,635	16,548	3,869	218	84.43%	80.19%

생각보다 금속 중앙교섭이 큰 무리 없이 전개되고 종료된 이유는 한미FTA 반대 파업이라는 불법정치파업이 돌발변수로 작용하면서 의외로 중앙교섭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일찌감치 현대차그룹의 조건부 참가 전략을 수용하여 2008년 이후의 ‘확약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7월 11일 5차 교섭 이후로는 기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이의 교섭 패턴을 답습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속부문 대기업들이 중앙교섭에 불참한 가운데서 교섭의제나 조합원들의 관심도, 교섭의 집중도는 현저히 제한되었으며, 결국 예년 수준의 내용과 분규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수가 2006년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약 14만 5천 명을 헤아리지만,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교섭에 대한 찬반투표에는 약 2만 명 정도만이 참가하였을 뿐이다.

한편 애초에 중앙교섭의 의제보다는 산별교섭 틀을 만들 것인가의 여부에 노사 모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내용은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금속 노사는 월 통상임금 900,000원과 통상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산별 최저임금에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산별협약과 기본협약에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라는 기존의 명칭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소속 회사(혹은 회사)로 변경, ▲신기계 및 신기술의 도입시 45일 전 조합에 통보, ▲기업의 분할·합병·분사의 경우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별 고용안정시스템을 구축, ▲산업공동화 같이 이미 합의한 주제들에 대하여 노사공동연구팀의 구성, ▲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선언적인 의미에서 금속산업 노사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렇듯 2007년 금속 산별교섭에서 중앙교섭이 힘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미FTA 반대 파업으로 인하여 주요 간부들이 수배를 받는 등 조직력이 약화되었고,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대기업 지부교섭의 목표를 ‘확약서’를 받는 것에 국한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차의 입장과 낮은 교섭일정을 감안하여 산별 파업에서 예외로 인정해 줌으로써 처음부터 2007년도 금속 산별교섭은 ‘밋밋한 교섭과 싸움’에 그치게 되었던 것이다.

〈표 6〉 2007년 금속산업 중앙교섭 최초요구안과 최종합의안의 비교

금속노조 최초요구안(5월 22일)	최종합의안(7월 25일)
<p>[기본협약]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로 명칭 변경</p>	<p>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소속 회사(혹은 회사)</p>
<p>[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936,320원)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최저임금 적용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p>	<p>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00,000원과 통상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신기계·신기술 도입] 신기계·신기술의 도입시 현행) 30일 전 → 갱신) 90일 전 조합에 통보</p>	<p>45일 전 조합에 통보</p>
<p>[분할·합병·분사]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현행) 60일 전 → 갱신)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p>	<p>70일 전 조합에 통보</p>
<p>[총고용보장·신규채용]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나 신규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p>	<p>[산별 고용안정시스템 구축]으로 대체</p>
<p>[노사공동연구팀 구성] ① 산업공동화·해외공장 조사분석과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 [산업공동화·해외공장연구팀]은 국민경제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공장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주간연속 2교대제 연구팀]은 심야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한다. ③ 각 연구팀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연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비용은 사측이 부담한다.</p>	<p>①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 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동수로 구성·운영한다. ②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p>
<p>[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비롯한 불공정한 납품 하도급거래를 하지 않는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납품계약시 반드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조가 요구하거나 필요할 시 납품하도급 거래에 관한 정보를 노조에 공개한다. ③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납품단가 계약시 물가를 반영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 ④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납품계약기간 동안 납품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고정하지 않고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한다. 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와 금속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에 고발한다.</p>	<p>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p>

<표 7>은 2008년 이후 중앙교섭에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명단이다. 현대차, 기아차 등 초대형기업은 물론 조합원수 100인 미만의 소기업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총 36개 사업장, 10만여 명이 2008년부터 산별 중앙교섭에 포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직은 이같은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약서의 내용은 대부분 모호한 편이며, 수준은 ‘노력한다’에 머문 경우도 많고, 로템, 현대제철, 쌍용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차나 현대차그룹의 결정에 연동하려는 모습도 다수 발견된다. 이렇게 내년 이후 산별 중앙교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심사업장 현대차의 경우 10월 중 산별교섭준비위원회 구성 이외에 구속력 있는 합의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2008년 중앙교섭 확약서 제출사업장

지부명	지회명	조합원수	중앙교섭
경기	경기금속(네오웨이브)	71	2008년 참가
경기	경기금속(유도실업)	14	2008년 참가
경기	두원정공	536	확약서
경기	경기금속(삼천리열처리)	26	확약서
경남	대원강업	802	별도 합의
경남	STX조선	1,030	별도 합의
경남	위아	985	확약서
경주	에코프라스틱	447	○(5/18 사용자단체 가입)
경주	오리엔스	79	○(5/31 사용자단체 가입)
기아차	-	28,864	확약서(중집승인)
대구	델타캐스트	40	○(결과이행)
대구	동협	53	확약서
대구	산도고경	42	확약서
대구	삼우정밀	43	○(결과이행)
대구	한국델파이	1,106	○(결과이행)
대우차	-	9,915	확약서(중집승인)

〈표 7〉의 계속

지부명	지회명	조합원수	중앙교섭
대전충북	로버트보쉬	607	2008년 참가
대전충북	엔텍	41	2008년 참가
대전충북	한라공조	809	2008년 참가
부양	롤스로이스마린	8	○(7/16 사용자단체 가입)
부양	엘림	17	확약서
부양	이원정공	136	확약서
쌍용차	-	5,251	확약서
울산	덕양산업	609	확약서
인천	영창악기	118	○(5/22 사용자단체 가입)
인천	캐스코드	81	○(기본협약)
전북	비엔테크	96	확약서
전북	일진소재	193	○(합의후 3일내 가입)
충남	현대제철(당진)	860	확약서
포항	대경특수강	156	확약서
미편제	현대하이스코	506	확약서
경남	메티아	146	확약서
울산	메티아	157	확약서
현대차	-	43,622	확약서
경남	로템	2,118	확약서
충남	다이모스	577	확약서
전 체	36개	100,161	

자료 : 금속노조 단협위원회 회의자료(2007).

〈표 8〉 주요 기업의 '확약서' 내용

사업장명	확약서 내용
기아자동차 지부	<p>금속노조 중앙교섭 확약서 관련 회사 입장 노사는 2008년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추천하는 '노사산별준비위원회'를 2007년 10월 중으로 구성하여 교섭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한다. ※ 노사 산별준비위원회 구성시 경총 및 완성차 4사의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력한다. 2007. 7. 24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조남홍</p>
대우자동차 지부	<p>확약서 금속노조와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는 2007년 임금교섭 이후 노사 산별준비위원회 구성 및 노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7. 7. 23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마이클에이 그리말디</p>
쌍용자동차 지부	<p>제목: 금속노조 중앙교섭 관련 확약서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주)는 중앙교섭과 관련된 노사 산별준비위원회 구성 및 공동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동종사의 중앙교섭 참여시 공동 참여한다. 2007. 7. 25 쌍용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형탁</p>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	<p>확약서 2007. 7. 27 당 사업장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교섭에 2008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당 사업장이 처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그룹내 주요 사업장의 추이에 따른다.</p>
포항지부 대경특수강	<p>확약서 (주) 대경특수강은 2008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교섭 참가에 최대한 노력한다. 2007. 8. 8 주식회사 대경특수강 교섭대표 장범석</p>
현대자동차 지부	<p>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확약서 회사는 노사관계의 발전과 합리적 산별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서 2007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다 음 - 노사는 노사공동으로 산별교섭위원회를 10월 안에 구성, 2008년 중앙교섭 개시 이전에 산별교섭의 제반 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여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 금속 노사는 미참여사업장이 산별교섭준비위원회에 공동참여토록 노력한다. 2007. 9. 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여철</p>
경남지부 로템	<p>확약서 회사는 2008년 중앙교섭 참여와 관련하여 그룹내 주요 사업장의 추이를 참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07. 8. 31. (주)로템 대표이사 부회장 이여성</p>

자료: 금속노조 내부자료.

IV. 지역 지부교섭과 대기업 지부교섭

지역 지부교섭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이종래 교수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신규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임원선거와 조직체계 정비가 늦어지면서 임단협 방침도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지연된 4월 25일야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부별 요구의 경우 지부 공통으로 128,805원의 정액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침 없이 해당 지부의 판단에 따라 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지부별로 고용안정, 산업안전, 우리 농산물 급식 제공, 지부 전임자 처우 개선 등 기존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지부별로 산발적인 내용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교섭과 관련한 치열한 노사 공방도 거의 없었는데, 지부 차원의 파업은 경기지부와 대구지부에서 일어났으나, 지부 요구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임금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2007년 금속노조의 지역 지부교섭은 2006년까지의 지부교섭을 계승·발전시키기보다는 대기업들의 합류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중앙교섭 쟁취와 금속노조 체계 인정 및 노조 차원의 통일성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 지부교섭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나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지부의 교섭이 인정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2007년의 경우 현대차 노사에 있어서 산별 중앙교섭 참가나 산별교섭 구조의 구체화는 점차 ‘논외의 현안’이 되어갔다. 이제 남은 문제는 대기업 지부 자체의 교섭 결과였다. 결과는 언론에서 ‘10년만의 무분규 타결’로 대서특필한데서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파업을 거치지 않고 9월 4일에 전격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현대차의 이러한 교섭결과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존 저신뢰-고비용의 소모적 교섭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킨 측면이다. 사실 기존의 교섭문화를 보면, 노조가 어차피 관성적 파업을 할 것이라고 사용자가 전제하기 때문에 사측은 자신의 진정한 교섭카드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노조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교섭안을 제시하게 되면, 노조는 그에 대한 불만의 에너지를 집결하여 대중동원과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로서도 파업이 없이 타결하게 되면, 이른바 어용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파업은 거쳐야 할 필수적인 통과 의례처럼 되어

온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은 그제서야 자신의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밤샘교섭 등의 모양새를 갖춘 이후에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기존 관행이었다.

그런데 2007년의 경우 현대차는 이미 연초에 성과급과 관련한 분쟁을 겪으면서 노사 모두 여론의 질타를 심하게 받은 바 있었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6월 말에도 한미FTA 반대 파업을 단행한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 지부의 지도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을 무릅쓰면서까지 임단협과 관련된 파업을 재차 시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 또한 사측은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을 앞둔 입장에서 흠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파업 타결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이같은 노사 양측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물밑교섭을 통하여 무파업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따라서 사측은 일찌감치 높은 선의 교섭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결국 예상대로 무파업 타결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저신뢰-고비용 교섭구조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07년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타결내용을 보면 대기업 노조(지부)의 실리주의와 지불능력을 배경으로 한, 혹은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대기업 노사의 담합이 두드러진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파업에 대한 노조의 부담보다는 회장 공판을 앞둔 사용자측의 부담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차 노조는 상당한 실리를 확보하였고, 결국 여론의 일각에서 무분규에 얽매어서 사측이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²⁾ 기본급 인상액에서 다른 완성차 대기업들을 능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과급에서 기존의 300% + 200만 원의 관행을 이어갔다. 이는 영업적자에 빠진 기아차에서 기존 관행을 깨고 200% + 100만 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역시 현대차의 양호한 경영실적과 지불능력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년 노조의 요구안에 삼입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관철되지 못한 고정상여금의 50% 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58세 임금수준으로 59세까지 1년간 정년이 연장되었고, 1인당 무상주 30주를 사측이 내놓기로 하였다.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지만 최근 주가가 7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으므로 210만 원의 가치에 해당한다. 기타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공장 전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고용보장 장치들이 확충·확인되었으며,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도 각 수준별로 100만 원씩 인상되었다.

결국 2006년 6월 산별로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처음 맞이한 산별 차원의 지부교섭에서

2) 대표적으로 매일경제신문, 2007. 9. 5.

〈표 9〉 현대차 2007년 임단협 합의 주요내용

	조항	합의내용
임금 협약	임금	8만 4천 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타결 즉시 100%, 추석전 100%, 연말 100%) 일시금 200만 원(타결시, 추석전)
단체 협약	전문	전국금속노조 인정
	조합전임간부	금속노조 중앙임원 피선 전임 인정
	정년	건강상 결격사유 없는 한 59세, 1년 연장(58세 임금유지)
	신기술 도입	차종 투입공장 결정에 따른 고용문제 발생시 노사공동위 심의의결
	해외 현지공장	해외공장 증설시 설명회 실시조항 추가
		해외공장 차종이관 및 동일차종 생산에 의한 고용문제 심의의결
		해외공장에서 타국가로 수출에 의한 고용문제 발생시 심의의결
	상여금	750%(하기휴가 50%, 2007년한 추석 지급)
퇴직금	장기근속퇴직자 100, 200, 300만 원 → 각 100만 원씩 인상	
별도 합의서	판매지점 총량 유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 직영 판매지점 유지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	노사전문위 2008년 3분기 세부 합의 통해 2008년 10월 실시
	전직군 직무조사	3개월 이내 용역기관 선정 후 직무조사 실시
	무상주	회사창립 40주년 기념으로 1인당 30주, 10월 말 지급
	지역사회공헌기금	지역사회 공헌기금 예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
	산별중앙교섭 참가	노사 산별교섭위원회를 10월 안에 구성, 2008년 중앙교섭 개시 이전에 산별교섭의 제반 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 금속 노사는 미참여사업장이 산별교섭준비위원회에 공동참여 토론 노력
기타	한미FTA 파업관련 고 소고발	타결 즉시 취하

자료 : 매일노동뉴스, 2007. 9. 6

오히려 더욱 더 대기업 노조의 실리주의가 심화된 결과를 나타냈다. 산별교섭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로 모호한 약속을 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이같은 결

〈표 10〉 2007년 완성차업체 임금인상 내역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기본급 인상액	84,000원	75,000원	75,000원	50,000원
인상률	5.8%	5.2%	5.1%	3.9%
성과급	300%	200%	200%	-
격려금·일시금	2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자료: 언론보도 종합

과는 산별전환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축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금속산업에서 산별노조와 교섭을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V. 평가와 전망

2007년 금속부문의 산별교섭은 2006년에 산별로 대거 전환한 대기업 노조들의 합류라는 과도기적 조건 속에서, 그리고 임원선거와 조직체계 정비, 임단협 방침 결정 등이 모두 늦어진 여건 속에서 어렵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파업이라는 돌발변수는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명분이나 사회적 의의와는 무관하게 산별교섭의 진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간부들의 수배와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피로도 증대, 내외적 비판과 노노간 계파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애초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대기업들의 중앙교섭 참가는 일찌감치 2008년 산별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를 받는 선으로 요구 수준이 떨어졌다. 그나마 확약서의 내용은 다소 모호한 약속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앙교섭을 주축으로 산별교섭이 조직화되는 것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존 지역 지부교섭은 특별한 요구 내용 없이 예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임금은 여전히 사업장별로 다루어졌다.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대기업 지부의 교섭은 기존 기업별 교섭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대표 사업장인 현대차의 경우 회장의 공판이라는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실리를 해당 조합원들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기업별에서 산별로 전환한다는 전인미답의 역사적 실험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노조측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내적 단결과 외적 정당성의 확보노력은 모두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협약서에 쓴대로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2008년 이후의 교섭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기업별 교섭의 관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 바, 노조측의 분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 역시 기존의 기업별 교섭이 지녔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대형 기업들의 경우 자신을 정점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합리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책임의 수행 차원에서도 매우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KL**

<참고문헌>

- 이종래(2006), 「금속산업 산별교섭」, 은수미 외(2006), 『2006년도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보건의료와 금속산업 부문』, 노동부.
- 조성재(2006), 「산별노조 전환 이후 금속산업 노사관계」, 『노동리뷰』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7a), 「2007년 금속 산별교섭 전망과 과제」,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7b), 「금속 산별교섭의 쟁점과 과제」,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 조성재·이종래(2007), 『2007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금속 산별교섭』, 노동부 중간보고서.